

# 북한의 민생경제 현황과 비핵화 이후 변화 가능성 - 중국의 민영경제 발전 사례를 중심으로 -

김미연 |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 nkmy83@kdb.co.kr

## I. 들어가며

2018~19년 두 차례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추진하던 시기만 해도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되었고, 이후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 가능성은 요원해졌다. 게다가 북한은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 상황에서도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사회주의 전면발전론’을 내세우는 한편, 시장을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등 적절한 통제의 경로를 따르고 있다.<sup>1)</sup> 중국, 베트남의 경제 개혁·개방 사례를 바탕으로 대내적인 개혁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미국과 관계 개선이 경제성장을 위한 선결 과제라는 데는 대체로 공통된 의견을 모은다.<sup>2)</sup>

본고는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미국과 대화가 진전될 경우 국제금융기구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북한경제가 성장하고 주민들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에 주목한다.<sup>3)</sup> 특히 북한이 핵문제 해결 이후 진정한 개혁·개방의 길로 나선다면 북한의 민생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 잠재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면 북한주민이

1) 김태경, 「사회주의 전면발전론」과 김정일 정권 중장기 국가전략: 개혁개방기 중국 장기 발전전략의 비교적 시각, 『한국정치연구』, 제32집 제1호, 2023, pp.197~229; 백명숙,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으로 본 북한 시장 발전의 경로분석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26권 제2호, 2022, pp.39~74.

2) 구기보, 「중국과 베트남 경제개혁의 북한에 대한 적용방안 모색」, 『국제지역연구』, 제27권 제2호, 2023, pp.21~42; 차성근,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개방 가능성에 대한 고찰: 중국과 베트남 개혁 개방사례와 비교」, 『전략연구』, 통권 제87호, 2022, pp.233~256.

3) 박해식·이윤석,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 『KIF VIP 리포트』, 2018-04, 한국금융연구원, 2018, pp.1~113; 임반석, 「주요 MDB의 개도국 지원 사례로 본 북한 지원에 대한 시사점」, 『국제지역연구』, 제27권 제3호, 2023, pp.145~180; 진윤호, 「베트남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국제금융기구 지원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비교경제연구』, 제30권 제2호, 2023, pp.127~149.

“좀 더 살기 좋아졌다. 이전보다 형편이 나아졌다.”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각자의 주머니 속 사정, 우리 집 형편이 아닐까 싶다.

이미 북한 주민의 주머니 속 사정을 알아보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다. 이석(2015)은 2008년 북한의 센서스 데이터를 토대로 가구소득을 추정하고 북한은 최빈국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sup>4)</sup> 채수란(2019)은 평양시민의 종합시장 경제활동에 관한 탈북민 면접조사를 통해 평양시민의 소득수준 및 특징을 분석했다.<sup>5)</sup> 김석진·홍제환(2019)은 다중지표군집조사(MICS)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과 개도국 재산을 비교한 결과, 북한의 재산수준은 2017년 기준 중상위 개도국보다 훨씬 낮고 최빈국보다는 한층 높으며, 중하위 개도국 평균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sup>6)</sup>

그러나 알다시피 북한주민의 가계소득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는 턱없이 부족하다. 앞서 소개한 기존 연구들도 시기상 10년이 지난 분석 결과이거나 특정 지역에 국한된 자료 또는 추정치이므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처럼 북한주민의 가계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 가운데 최근 통일부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서 다른 사경제 활성화, 자산 사유화에 관한 주요 설문 응답 결과들은 북한주민들의 주머니 속 사정과 가계 형편 변화에 대한 간접적인 파악을 돕는다.<sup>7)</sup>

한편 개혁·개방 시기 중국의 민영경제 발전 경험 사례는 비핵화 이후 북한의 민생경제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유용하다. 중국의 경험을 통해 경제 자원을 중심으로 북한 당국 기관 소속 간부, 돈주, 일반 주민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 II. 북한의 민생경제 현황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2016년 이후 대북 경제제재 본격화 이전까지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성장 추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2017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8)</sup>

4) 이석, 「북한의 가구경제 실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정책연구시리즈』, 2015-11, 한국개발연구원, 2015, pp.1~117.

5) 채수란,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를 통해 본 평양시민의 가처분소득과 소비행태: 종합시장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77집, 2019, pp.283~324.

6) 김석진·홍제환,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KINU 정책연구시리즈』, 19-03, 통일연구원, 2019, pp.1~131.

7) 통일부 외,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통일부, 2024, pp.1~280.

8) 김정은 집권 전반기(2012~16년)와 후반기(2017~22년)로 구분하면, 전반기 평균 경제성장률은 1.2%인 반면, 후반기 평균 경제성장률은 -2.0%를 기록하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요인에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무역 감소, 수해 피해 등도 포함된다.

〈표 1〉 김정은 집권기 북한 경제성장률

(단위: %)

| 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성장률 | 1.3  | 1.1  | 1.0  | -1.1 | 3.9  | -3.5 | -4.1 | 0.4  | -4.5 | -0.1 | -0.2 |

자료: 한국은행(<https://ecos.bok.or.kr>, 접속일: 2024. 5. 16).

북한의 민생경제 현황을 보여주는 척도인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집권 전반기에는 사금융의 급속한 성장 등이 관찰되었으나 2017년 이후 시장 위축, 북한가계의 금융자산 및 부채규모 축소가 나타났다.<sup>9)</sup> 비교적 최근의 북한 사금융 실태를 계량적으로 제시하는 자료에서는 사금융의 규모와 경제적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10)</sup> 또한 사금융의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었으나 일반 주민보다 특권층을 중심으로 발달해 오히려 민생경제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sup>11)</sup> 반면에 앞선 연구 결과와 달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사업을 통해 부자가 된 주민이 ‘ 많아졌다 ’고 응답한 비율이 김정은 집권 이전에는 59.9%였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 67.7%로 증가했다. 이는 국영경제 중심의 경제활동을 하던 북한주민이 사경제 중심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관찰되는 점, 사경제활동 중 사금융 행위가 점차 증가하는 점, 그리고 주택, 기업 등 비교적 소규모 국유자산의 사유화가 확대되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sup>12)</sup>

## 1. 사경제의 활성화

2010년 이전만 해도 채소 및 과일 등의 재배, 가금·축산 및 어업, 가내 수공업품 제작 등과 같은 북한주민의 사경제활동은 시장 판매를 통한 소득 확보가 아닌 가구 자체 소비를 위한 경제활동으로 이해되었다.<sup>13)</sup>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은 관료, 자본가 등의 이익을 유지·확대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시장 친화적 정책을 기반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sup>14)</sup>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시장의 양적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시장의 시설규모가 확대되었으며 공식적인 종합시장 이외 다양한 방식을 통한 상품의 소비·유통이 점차 증가했다.<sup>15)</sup> 이러한 변화 속에 시장에서 소매 장사 이외 텃밭·폐기밭 경작 처분, 되거리장사, 밀수 등 다양한 사경제활동 유형들이 목격되고 그 비중도 커졌다. 게다가 사경제활동의 증가는 비공식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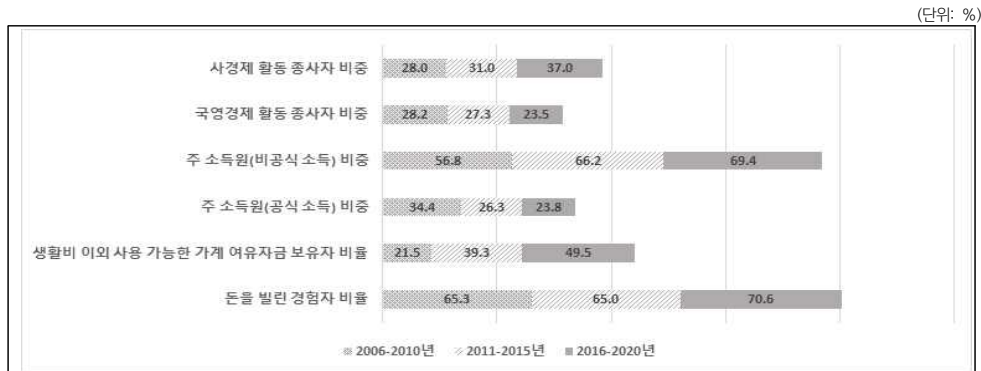
9) 조동호 외, 「북한 사금융 실태와 북한 금융제도의 변화」, 『KIF Working Paper』, 2021-01, 한국금융연구원, 2022, pp.1~4.  
10) 이주영·문성민, 「북한 비공식금융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BOK 경제연구』, 제2020-16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20, pp.1~35.  
11) 이지선,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금융 동향과 변화 가능성」, 『INSS 연구보고서』, 2022-19, 국가안전전략연구원, 2022, pp.67~68.  
12) 통일부 외(2024), pp.49~158.  
13) 이석(2015), pp.44~49.  
14)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KINU 연구총서』, 16-24, 통일연구원, 2016, pp.9~16.  
15)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KINU 연구총서』, 22-28, 통일연구원, 2022, pp.9~10.

확대로 이어져 실제 생활에 필요한 자금 이외 사용이 가능한 여유자금 보유자 비율도 증가시켰다.<sup>16)</sup>

북한가계의 비공식 소득 증가는 소비재 시장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기업의 시장 판매 경로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소비재 생산과 유통이 다양해졌다.<sup>17)</sup> 식료품 위주의 지출에서 의류나 내구재 소비 지출로 변화된 소비패턴의 변화는 가계소득의 증가, 사경제 활성화와도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다. 좋은 품질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은 주민의 생활여건 및 후생수준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시장보다 가격이 높아도 품질 좋은 상품을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상점의 종류와 이용 횟수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sup>18)</sup>

한편, 사경제의 활성화가 가져온 가계소득 증가와 지출에서 사금융의 변화를 떼어 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여유자금의 은행, 저금소 보관 비율이 작게나마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집 보관 비율이 높다.<sup>19)</sup> 그러나 사경제 활성화로 인해 개인 창업 등이 증가해 장사 밀착을 위한 ‘개인 대 개인’ 간 금융 거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게다가 사금융을 주도하는 돈주가 개인에게 자금을 유통하던 역할에서 국영기업소, 협동농장까지도 거래함으로써 생산과 서비스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사경제 발달을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sup>20)</sup>

[그림 1] 사경제 활성화 현황



자료: 통일부 외,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통일부(2024) 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16) 사경제활동 인구의 5년 단위 시계열 변화에 따르면 사경제 전업 종사자 비중은 2006~10년(28%), 2011~15년(31%), 2016~20년(37%)로 계속해서 증가한 반면, 국영경제 전업 종사자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28.2%, 27.3%, 23.5%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또한 2016~20년 주된 소득원이 공식 소득이라고 답한 비율이 23.8%인 반면 비공식 소득이라고 답한 비율은 69.4%로 조사되었다. 통일부 외(2024), pp.54~64.

17) 최지영 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 『KINU 연구총서』, 23-17, 통일연구원, 2023, p.47.

18) 홍민 외,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KINU 연구총서』, 23-27, 통일연구원, 2023, pp.134~137.

19) 여유자금의 은행, 저금소 보관 비율은 2006~10년(1.4%), 2011~15년(0.8%), 2016~20년(2.9%)로 응답 분포를 보였다. 통일부 외(2024), pp.125~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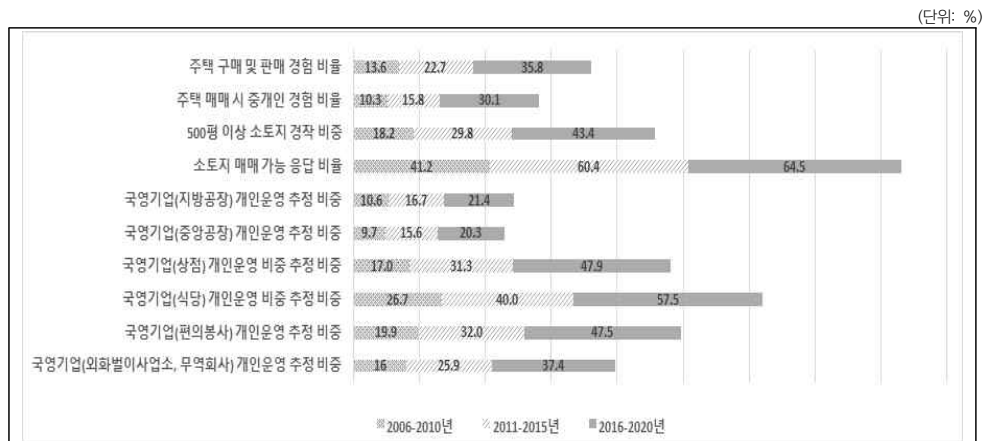
20) 조성은, 「김정은 시대 북한 가계소득 변화와 함의」,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pp.15~16.

## 2. 자산의 사유화

‘내 집 마련’의 꿈은 북한주민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에서 주택 이용권을 거래하는 시장은 1970년대부터 형성되어 있었다. 간부들에게 배급받은 주택은 노후 대비책이자 중요한 개인 재산으로 인식되었고,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내 집 짓기’가 유행했다. 게다가 1980년대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해외 연고자들이 북한으로 이주하면서 주택 배정 제도는 유명무실해졌고 주택의 음성적 매매가 성행했다.<sup>21)</sup> 1990년대에는 주택 이용권 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규정들이 만들어졌으나 여전히 거래는 지속되었다. 이후 2000년대 시장의 발달, 자본을 축적한 개인들의 주택 건설 참여 등으로 주택 이용권 거래 시장이 생겨났고 중개업자와 거래소를 통한 주택 교환 사례도 등장했다.<sup>22)</sup> 더욱이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된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은 거래 열풍을 촉진했다. 주택 건설 목표를 채우기 위해 건설에 필요한 당국의 인·허가가 쉬워졌고, 돈주가 주택 건설의 투자자가 됨으로써 중개인을 통한 주택 분양이 자연스레 나타났다.<sup>23)</sup>

주택 이용권 거래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토지에 대한 사유화도 진행 중이다. 북한은 토지법 개정에 신중히 접근하면서도 일련의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소토지 개간 및 거래 관련 문제에

[그림 2] 자산 사유화 현황



자료: 통일부 외,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통일부(2024) 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21) 홍민,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도시정치」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8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4, pp.36~45.  
22) 문용안, 「북한 실태검립 관련 법제를 통해 본 북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 『북한법연구』, 제18호, 2018, pp.111~149.  
23) 홍민 외(2023), pp.30~32.

대응해 왔다.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매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2011년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개간한 개인 텃밭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사용 허가를 공식화함으로써 소토지의 사유화 및 매매는 확대되었다.<sup>24)</sup> 기업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허가된 기관·단체의 명이나 생산수단을 빌리거나 돈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개인 기업을 운영하는, 사실상의 사유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sup>25)</sup> 전반적으로 국가 소유의 중앙·지방 공장을 비롯하여 상점, 식당, 편의 서비스업에서 개인 운영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 III. 중국의 경험 : 민영경제 발전 사례

중국의 경제 개혁·개방 과정에서 성공을 이끈 요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덩소평(鄧小平)의 지도력을 통한 민영경제의 발전이다.<sup>26)</sup> 1992년 덩소평은 선전(深圳) 경제특구 등 남방 연해 지역 시찰 이후 중국 개혁·개방의 새로운 방향은 기존 계획경제 체제에 대한 수정이 아닌 완전한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민영경제 도입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 대해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유리’하다면 과감히 발전시켜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이 시기 민영경제는 국영경제를 ‘보충’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전환되었으며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공 사례를 이끌었다.

#### 1. 시장과 민간자금의 활용

중국 원저우(溫州)지역은 가정 수공업 형태로 제품을 생산해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농민들의 생활이 개선된 지역으로 유명하다. 원저우지역의 상인을 ‘동양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원저우지역 사람들은 자신의 가게규모가 작은 것에 전혀 패념치 않는다. 이들은 어디서든 상품을 만들어 장사를 하고 시장을 만들어 냈으며, “원저우 사람 있는 곳엔 시장이 있다”라는 말이 통용되었다. 일찍이 원저우지역은 땅이 좁고 인구가 많아서 가족 생산 도급제를 실시한 이후 대량의 유희 노동력이 생겼다. 1980년대 초부터 집집마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손재주를

24) 북한에서 소토지는 비농경지 중 개인이 경작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소토지 유형에는 텃밭, 부업지, 주민지구 소토지와 산업소토지, 산림소토지, 수역소토지가 있다. 소토지 경작비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 규모는 수십평에서 수천평으로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텃밭은 30~50평 규모, 폐기밭은 100~1,000평으로 2004년 북한 당국이 400평까지 소토지 경작을 허용함에 따라 텃밭 경작은 합법, 폐기밭 경작은 불법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김병욱, 「북한토지법제 동향과 변화전망」, 『통일법제 연구』, 18-19, 한국법제연구원, 2018, pp.25-77.

25) 양문수·윤인주, 「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 수준과 추세에 관한 정량적 분석」, 『통일연구』, 제20권 제2호, 2016, pp.46-88.

26) 전재성, 「당소평과 김정일: 중국 개혁 개방 모델이 2014년 북한에 주는 함의」, 『스마트 Q&A 인터뷰』, 서울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2014, pp.1~5.

이용해 라이터, 안경, 구두, 의류, 나사, 밸브 등 다양한 수공업 제품을 생산해 시장에 판매했다. 원저우 시는 소규모 상품 전문 판매 시장을 허용하고 전국 각지의 구매상들을 불러 모았다. 1985년에는 13.3만개의 가정 수공업 공장들이 생겨났으며 1982년 705개로 시작한 소규모 상품 시장 매대가 6,131개로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사례 1>은 당시 원저우지역에서 시장과 민간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규모 조립 공장이 대규모 민영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다.

#### <사례 1> 시장 및 민간자금을 활용한 성공 사례

##### ■ 라이터 왕 저우다후(周大虎·72세)<sup>27)</sup> : 시장 및 민간자금 활용

저우다후는 1980년대 중반부터 원저우지역에서 라이터 회사를 차려 전자 라이터를 조립 생산했다. 1990년대 초반 국내 라이터 시장에서 부품 부족 현상이 초래되었고, 그는 광저우(廣州)로 가서 전자 라이터 부품에 대한 해외 수입권을 독점했다. 그러나 대량의 라이터 조립용 부품 수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그는 민간금융을 활용해 원저우 시의 라이터 생산 공장에 수입 부품을 판매했다. 그 결과 원저우 시 라이터 업체들이 다시 생산에 돌입하게 되었고, 저우다후는 소규모 라이터 조립 공장 사장에서 부품 수입 독점권을 가진 대규모 민영기업인 저장다후(大虎) 라이터공사의 CEO가 되었다.

## 2. 개체업에서 민영기업으로

중국은 농촌 개혁으로 발생한 노동력 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자에게 소형의 수공업, 상업, 음식점, 서비스업, 수리업 및 국가계획 외 상품 판매와 도매업 종사를 허용했다. 이러한 개체업 종사자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1978년 14만명에서 1988년에는 2,305만명으로 개혁·개방 초기에 비해 약 165배나 증가했다. 이들은 점차 경영규모가 확대되어 1990년대에는 개인 수입의 자본화, 공유기업의 민영화, 인력자본의 기업화를 통해 민영기업으로 성장한다.<sup>28)</sup>

27) 『이투데이』, 「라이터 왕 저우다후(周大虎)」, 2021. 3. 18.

28) 민영경제는 모택동이 「항일시기 경제문제와 재정문제」라는 글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국유, 국영 이외의 모든 경제형태와 경영방식을 포함한 경제적 범주로서 1. 민간에서 소유와 경영을 모두 담당하는 형태(개체공상호, 사영기업), 2. 국유, 집체기업이 도급제, 임대, 매각, 합병, 주식참여 등 형태로 집체소유 또는 민간 소유이나 기업경영은 민간이 하는 형태 3. 국유주식, 민간주식 등이 혼합된 혼합소유제 형태를 포함한다. 림금숙, 『중국의 민영경제 발전 연구』, 연변대학출판사, 2018, pp.1~154.

## 〈사례 2〉 민영기업 형성 및 성공 사례

### ■ ‘바보 해바라기씨’ 창시자 넨광주(年廣久 · 87세)<sup>29)</sup> : 개인 수입의 자본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간식인 해바라기씨를 상품화해 재벌이 된 사례가 있다. ‘바보 해바라기씨’라는 뜻의 중국 최고 해바라기씨 브랜드인 ‘샤쯔과쯔(傻子瓜子)’의 창업자 넨광주가 주인공이다. 넨광주는 개혁·개방 이후 시장에 점포를 차려 박리다매 전략으로 해바라기씨를 팔았다. 1980년 ‘바보 해바라기씨’ 상표권을 등록했고 시장 수요량이 늘자 1983년 가공 공장은 100여명의 종업원을 보유한 큰 공장이 되었고 1984년 공사(公私)합영 형태로 바보 해바라기씨 회사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경품 제공, 사적 고용 문제 등으로 넨광주는 감옥에 수감됐으나 등소평의 민영경제 발전 촉진에 힘입어 1992년 석방되었다. 그는 다시 전국 13개 도시에 23개 가공 공장을 설치하고 상품을 대량 생산하여 연 생산량 3천만근, 생산액 1억 원을 초과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도 진출했다.

### ■ 중국가전업체 ‘귀메이(国美 · Gome Retail)’의 황광위(黃光裕 · 54세)<sup>30)</sup> : 공유기업의 민영화

황광위는 1987년 베이징(北京)의 작은 국영 가전상점의 책임자였다. 1993년 그는 국영상점을 도급받아 체인점을 통일적으로 귀메이라 명명하고 일률적인 가격·판매방식 등을 적용했다. 2004년 귀메이는 증권시장에 상장했고, 같은 해 100개 유명 가전제품 판매 기업에서 2위로 선정됐다. 2006년 귀메이는 상하이(上海) 영락(永樂)생활가전회사를 매입해 과거 국유대형 백화점들이 국내 가전 제품시장을 독점하던 양상을 바꿔 놓았다. 2007년 귀메이는 베이징 대중전기를 인수·합병함으로써 2013년에 이르러 전국 256개 도시에 1,605개 분점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했다.

### ■ 레노버(Lenovo) 그룹, ‘렌상집단유한공사(联想集团有限公司)’<sup>31)</sup> : 인력자본의 기업화

레노버는 1984년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중관촌(中關村)에서 11명의 중국과학기술원 출신들이 만든 작은 기업으로 출발했다. 이 당시만 해도 레노버는 중국의 PC 제조업체에 불과했다. 그러나 1987년 IBM과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로소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고 이후 자체 브랜드 PC인 286컴퓨터 레전드PC를 출시해 PC 제조업체로 탈바꿈하여 중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컴퓨터를 개발해 중국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레노버가 세계에 이름을 널리 알린 결정적 계기는 2005년 IBM의 PC사업부 인수를 통해 IBM의 우수 인력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레노버의 성공 요인은 중국시장을 먼저 장악해 체력을 키운 다음 활발한 인수합병(M&A)으로 규모를 성장시킨 데 있다.

29) 『뉴스퀘스트』, 「당샤오팡도 인정한 ‘해바라기씨 대왕’ 넨광주」, 2019. 11. 19.

30) 『조선비즈』, 「한때 中 최고 부자 ‘유통왕’...감옥 갔다 왔더니 세상이 변했다」, 2021. 4. 9.

31) 『비즈니스포스트』, 「글로벌 기업이 된 레노버의 인수합병 비결」, 2024. 11. 13.

### 3. 토지 이용권의 사유화

앞서 원저우지역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1979년부터 가족 생산 도급제를 시행했다. 가족 생산 도급제는 북한의 협동농장과 비슷한 인민공사의 토지를 가족 단위로 분배하여 경작하게 함으로써 농업 생산력이 향상됐고, 중국정부는 수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료를 수취할 수 있었다. 이후 1988년에는 헌법에서 토지 임대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1990년에 토지 이용권의 양도, 임대, 저당을 허용했다. 개혁·개방과 더불어 중국은 토지소유권을 국가가 갖고 있지만 토지 이용권에 한해서는 사유화, 상품화함으로써 국가 재정 예산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sup>32)</sup>

### 4. 성공한 민영기업가들의 출신

중국의 민영경제 발전을 주도한 민영기업가들의 출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혁·개방과 더불어 형성된 민영기업가들의 출신을 보면 농촌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농민 출신, 리더십과 경제관리 경험이 있는 간부 출신, 기업관리 경험과 전문 기술을 소유한 국유기업 관리자 출신, 전문지식을 소유한 과학기술자 출신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은 각자의 성장 배경과 경험을 잘 살려 성공한 민영기업가로 탈바꿈했다.

‘밭을 짓고 언덕에 올라온 사람’으로 알려진 량희삼(梁希森)은 산둥성(山東省)지역의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다. 그는 개혁·개방 이후 도급받은 토지 농사 수입으로 제분소를 차려 기업을 확대해 산둥성 10대 민영그룹의 대표가 되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소 축사, 생물 공장을 꾸려 농민들을 취업시키는 한편, 136개의 유럽식 별장을 지어 무료로 농민들을 입주시켜 가난한 어린 시절에 꿈꿨던 새 농촌 건설의 꿈을 이뤘다. 중국 국무원 기관사물관리국 재무사(財務司) 출신 왕문경(王文京)은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서 ‘철밥통을 던지고 창업에 뛰어들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자로 명성을 떨쳤다. 한편 중국 산둥성에 설립된 칭다오기전공장(淸島機電廠, 국유기업) 소속 부공장장이었던 장서민(張瑞敏)은 은행 대출을 통해 가전제품 기업을 설립했고 국내외 지사, 100여 개 국가에 판매망을 가진 국제적 그룹으로 성장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산업을 선도하는 기업가’로 변신한 중의환능(中宜環能)기술유한회사 오동(吳桐) 대표는 과학기술자 출신으로 ‘도시쓰레기 분류 및 소각 기술’을 발명해 중국에서 환경보호 설비를 생산해 유명해졌다.<sup>33)</sup>

32) 김병욱(2018), pp.78~90.  
33) 림금숙(2018), pp.121~126.

## IV. 북한의 민생경제 변화 가능성

중국의 경험은 북한의 민생경제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몇 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 시장과 민간자금의 적극적인 활용은 민영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둘째, 개인 수입의 자본화, 공유기업의 민영화, 인력자본의 기업화 등을 통해 개체업이 민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성공한 민영기업가들 사례에서 각자의 성장 배경과 경험을 잘 살리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토지 이용권의 사유화는 농업 생산력 증대, 재원 조달 효과를 가져왔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화와 사유화는 아직 제도적 수준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2017~18년 이후 사경제활동 단속, 시장 압박, 계획경제 재가동, 주민 통제 및 감시 강화, 이념·문화 단속과 사회 기강 재확립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sup>3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경제활동 종사자가 국영경제활동 종사자 비율보다 점점 증가하고 있고, 자연스레 주 소득원에서 공식 소득보다 비공식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생활비 이외 사용이 가능한 가계 여유자금 보유자가 많아지고 있으며 돈을 빌린 경험도 다수다. 소규모 자산의 사유화 측면에서도 중앙·지방 공장뿐 아니라 상점, 식당, 편의업, 무역업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비중이 늘고 있으며, 소규모 토지와 주택 매매도 활성화되고 있다. 시장 단속 재강화 속에서도 이러한 변화들이 자발적으로 확대되어 발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자산의 축적·투자를 통해 보유 자산을 증식하는 행태가 오히려 보편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북한이 경제 개혁·개방의 길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경우, 북한의 민생경제는 긍정적인 변화로 발현할 가능성이 크다.<sup>35)</sup> 예컨대 북한은 현재 소토지가 완전한 개인 소유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이용권을 거래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위법이지만 북한 당국은 묵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토지 개간을 엄격히 금지하지만, 거래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욱 소토지 소유를 희망한다. 심지어 주택 거래 시 집 텃밭 값은 별도로 계산하고 있으며 입지가 좋은 소토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sup>36)</sup> 중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소토지는 개혁·개방과

34)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 사회 단속을 위한 법제 정비도 병행했다. 김진하, 「자유민주적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통일연구원·세계지역학회 주최 공동 세미나 「북한 대남전략과 전환 대응과 자유 기반 통일론 확산방안」, 발표 자료, 2024. 6. 5, p.85.

35) 북한 경제 변화의 수준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나 대체로 기존 연구에서도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화, 사유화가 이전에 비해 진전되어 경제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향해 있다는 데 동의한다. 조동호,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평가」, 『한국경제포럼』, 제13권 제4호, 2021, pp.29~32.

36) 김병욱(2018), p.89.

함께 부동산으로 재조명될 수 있다. 게다가 북한 당국 입장에서도 소토지 경작 및 거래 등을 통해 재정 예산을 확보하고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마다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시장을 중심으로 주민, 관료, 돈주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아파트 건설 붐은 국가권력, 민간자본, 시장, 도시 관료들의 협력관계를 형성했다.<sup>37)</sup> 북한 당국 주도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인적자원 포함) 부족으로 인해 기관 소속 관료들은 인허가 권한 등을 판매하고 돈주와 주민은 기관의 과제 달성을 돕는다.<sup>38)</sup> 당국 주도의 사업 이외 무역 거래, 상업, 기업 운영 등을 통해 발생한 이윤 또한 주민, 관료, 돈주가 공유하게 됨으로써 이들의 파트너십은 긴밀해져 왔다. 물론 이들의 관계도 그룹 내 분화, 계층화가 발생하면서 균열이 발생하기도 한다.<sup>39)</sup> 그러나 기득권층과 주변인으로 나누어지더라도 이들이 경제 자본을 중심으로 역할 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중국 민영기업가들은 출신 배경과 경험이 달랐지만 민영화 물결을 타고 적응을 넘어 성공을 이루었으며, 중국에 거주면 이들이 가까운 미래 북한의 민영기업가로 변모할 잠재력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sup>40)</sup>

본고는 북한의 민생경제 실태를 탈북민 설문 응답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 시 민생경제 변화 가능성을 중국의 사례를 통해 예측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여전히 실증적 자료에 기반한 실태 평가, 그리고 변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족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바는 지금처럼 대북제재가 장기화로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지닌 변화와 성장의 잠재력이 지금보다 더 커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해 본 바로 지금,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한 ‘묘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시점이다.

37) 홍민(2014), pp.43~44.

38) 김윤희, 「북한 사금용의 흐름과 구조 동학에 대한 탐색」, 『세계지역연구논총』, 33집 3호, 2015, pp.92~93.

39) 이지선(2022), pp.45~46.

40) 앞서 소개한 중국의 민생경제 발전 사례는 연변대학교가 중국어로 집필한 교재를 김일성종합대학과 학술교류를 위해 한국어로 번역한 책자에 수록된 사례다. 해당 책자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소개된 사례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구기보, 「중국과 베트남 경제개혁의 북한에 대한 적용방안 모색」, 『국제지역연구』, 제27권 제2호, 2023.
- 김병욱, 「북한토지법제 동향과 변화전망」, 『통일법제 연구』, 18-19, 한국법제연구원, 2018.
- 김석진·홍제환,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KINU 정책연구시리즈』, 19-03, 통일연구원, 2019.
- 김윤희, 「북한 사금융의 흐름과 구조 동학에 대한 탐색」, 『세계지역연구논총』, 33집 3호, 2015.
- 김진하, 「자유민주적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통일연구원·세계지역학회 주최 공동 세미나 「북한 대남전략과 전환 대응과 자유 기반 통일론 확산방안」, 발표 자료, 2024. 6. 5.
- 김태경, 「‘사회주의 전면발전론’과 김정은 정권 중장기 국가전략: 개혁개방기 중국 장기 발전전략의 비교적 시각」, 『한국정치연구』, 제32집 제1호, 2023.
- 림금숙, 『중국의 민영경제 발전 연구』, 연변대학출판사, 2018.
- 문홍안, 「북한 살림집법 관련 법제를 통해 본 북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 『북한법연구』, 제18호, 2018.
- 박해식·이윤석,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 『KIF VIP 리포트』, 2018-04, 한국금융연구원, 2018.
- 백명숙,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으로 본 북한 시장 발전의 경로분석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26권 제2호, 2022.
- 양문수·윤인주, 「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 수준과 추세에 관한 정량적 분석」, 『통일연구』, 제20권 제2호, 2016.
- 이석, 「북한의 가구경제 실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정책연구시리즈』, 2015-11, 한국개발연구원, 2015.
- 이주영·문성민, 「북한 비공식금융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BOK 경제연구』, 제2020-16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20.
- 이지선,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금융 동학과 변화 가능성」, 『INSS 연구보고서』, 2022-19,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 임반석, 「주요 MDB의 개도국 지원 사례로 본 북한 지원에 대한 시사점」, 『국제지역연구』,

- 제27권 제3호, 2023.
- 전재성, 「덩샤오핑과 김정은 : 중국 개혁 개방 모델이 2014년 북한에 주는 함의」, 『스마트 Q&A 인터뷰』, 서울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2014.
- 조동호,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평가」, 『한국경제포럼』, 제13권 제4호, 2021.
- 조동호 외, 「북한 사금융 실태와 북한 금융제도의 변화」, 『KIF Working Paper』, 2021-01, 한국금융연구원, 2022.
- 조성은, 「김정은 시대 북한 가계소득 변화와 함의」,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 진운호, 「베트남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국제금융기구 지원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비교경제연구』, 제30권 제2호, 2023.
- 차성근,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개방 가능성에 대한 고찰: 중국과 베트남 개혁 개방사례와 비교」, 『전략연구』, 통권 제87호, 2022.
- 채수란,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를 통해 본 평양시민의 가처분소득과 소비행태: 종합시장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77집, 2019.
- 최지영 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 『KINU 연구총서』, 23-17, 통일연구원, 2023.
- 통일부 외,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통일부, 2024.
- 홍민,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도시정치」,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8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4.
-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KINU 연구총서』, 22-28, 통일연구원, 2022.
- \_\_\_\_\_,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KINU 연구총서』, 16-24, 통일연구원, 2016.
- \_\_\_\_\_,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KINU 연구총서』, 23-27, 통일연구원, 2023.
- 한국은행(<https://ecos.bok.or.kr>, 접속일: 2024. 5. 16).
- 『이투데이』, 「라이터 왕 저우다후(周大虎)」, 2021. 3. 18.
- 『뉴스퀘스트』, 「덩샤오핑도 인정한 ‘해바라기씨 대왕’ 벤광주」, 2019. 11. 19.
- 『조선비즈』, 「한때 中 최고 부자 ‘유통왕’...감옥 갔다 왔더니 세상이 변했다」, 2021. 4. 9.
- 『비즈니스포스트』, 「글로벌 기업이 된 레노버의 인수합병 비결」, 2024. 11. 13.